

##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書評

延 河清 著 韓國開發研究院 刊(1986) 總348面

鄭 暢 泳

## \*

北韓經濟에 대한 研究는 그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分野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著者が 指摘하고 있듯이 우선 北韓社會가 수많은 社會主義國家中에서도 가장 閉鎖的인 社會로서 統計資料가 지극히 制限되어 있으며 發表되는 資料마저도 信賴度가 낮다는 것이 한 가지 理由일 것이다. 이 밖에 南·北韓간의 理念的인 對立도 北韓經濟를 客觀的인 立場에서 學問的으로 研究·分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사이에 존재하는 基本的인 體制上的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基準에 따라서 北韓經濟를 分析하고 南·北韓 經濟를 比較·評價함으로써 韓國經濟의 優越性만을 강조하여 北韓經濟

의 實狀을 客觀的으로 理解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統一을 위한 제일 첫번째 段階가 南·北韓 經濟交流의 實現에 있다고 할 때, 이를 위한 基礎作業으로서 北韓經濟에 대한 客觀的이고 學問的인 研究의 重要性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큰 것이다.

이번에 韓國開發研究院의 延河清 博士가 지금까지 出版된 著書 및 論文들을 蒐集하고 北韓經濟에 대해 구할 수 있는 統計資料들을 광범위하게 活用하여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이라는 著述을 펴낸 것은 이 分野의 研究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점을 상기할 때 學界에 대한 커다란 貢獻이라고 생각된다. 이 冊에서는 冊名과는 달리 北韓經濟의 主要한 側面을 거의 모두 포괄하여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있어서 오히려 「北韓經濟論」이라는 題目이 이 冊의 內容을 더욱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 冊은 모두 9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章의 序論에 이어서 第2章에서는 우선 南·北韓의 GNP와 1人當 GNP를 比較하고 있다.

1984년 현재 韓國은 GNP와 1人當 GNP에 있어서 각각 北韓의 5.5배와 2.6배에 달하고 있음을指摘한다. 그러나 著者が 말한 대로 體制上的 基本的인 差異點, 資料의 制約 및 換率適用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平面的인 比較는 그 意義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오히려 貨幣的인 側面에서의 比較보다는 實物的으로 南·北韓간의 生活的 質(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PQLI)을 比較한다든가 基本需要(basic human needs)의 充足이라는 側面에서 본다든가 하는 것이 資料의 求得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는 觀點을 정반대로 잡아 北韓經濟의 立場에서 南·北韓의 經濟力을 比較·評價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일 것이다.

著者は 總量比較에 이어서 分斷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이 推進해 온 經濟計劃의 特性을 比較하고 있다. 北韓經濟는 經濟建設과 軍備擴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重工業最優先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므로 輕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이 낙후되어 産業間的 不均衡이 심화되고 經濟成長은 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물론 이는 北韓經濟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社會主義經濟가 지니는 共通의 취약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社會主義經濟 共通의 非效率性이 존재함을 감안하고 本報告書의 <表 2-2>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여러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經濟成長率을 比較해 보면 北韓도 成長의 側面에서는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表 3-1>이 보여주는 것처럼 北韓當局 自身이 發表한 工業部門의 成長率이 分斷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減少趨勢를 나타내는 것은 北韓의 經濟體制

自體가 지니고 있는 基本的인 취약점에 연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與件에 맞지 않는 自力更生原則下的 重工業最優先政策과 과도한 軍備支出임은 쉽게 납득이 갈 것으로 판단된다.

經濟計劃의 比較에 이어서 다음에는 南·北韓의 貿易構造를 比較하고 있는데, 韓國은 美國과 日本에 대한 依存도가 높은 반면 北韓은 1982년의 경우 貿易量의 比重이 蘇聯 33.9%, 中共 21.2%, 日本 17.5%로서 이들 세 나라에 대한 依存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南·北韓 공히 貿易比重이 높고 資料의 蒐集이 비교적 용이한 日本에 대한 南·北韓의 輸出入構造를 比較·分析함으로써 南·北韓의 貿易構造 및 貿易競合關係를 상세하게 研究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최근 北韓의 第2次 7個年計劃(1978~84)을 評價하고 있다. 著者は 北韓이 自國의 資源賦存 樣相에 적합하지 않은 自力更生原則의 추진으로 인한 技術水準의 落後와 生産施設의 老朽化, 그리고 硬直的인 中央集權的 經濟運用 및 産業部門간의 不均衡이 北韓經濟政策의 ‘失敗原因’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北韓經濟體制가 지니고 있는 基本的인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데 經濟의 非能率을 초래하여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北韓의 經濟成長率을 鈍化시킨 主要因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第4章에서는 北韓의 對外開放政策을 分析하고 있다. 北韓은 1970년 이후 既存路線을 어느 정도 修正하여 對西方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對西方輸入增加는 外債를 증가시켜 1975년 이후부터 北韓은 外債에 대한 元利金償還을 연기하는 사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 西

方으로부터의 輸入增大가 어려워진 北韓은 第2次 7個年計劃期間(1978~84) 중에 다시 中·蘇와의 經濟協力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狀況을 타개하기 위하여 北韓은 1984년 9월에 借款과는 달리 元利金 償還負擔이 따르지 않는 外國의 合作投資를 유치할 목적으로 ‘合作會社運營法’(合營法)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北韓의 對外開放 政策의 劃期的인 轉換點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合營法 實施 이후 호텔, 百貨店, 病院의 建設이 3件 實現되었고 현재 合營을 위해 交渉中인 것이 30餘件이 된다고 하나, 著者が 指摘하였듯이 北韓經濟體制의 基本的인 屬性에 비추어 볼 때 合營事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밖에 第4章에서는 南·北韓간에 交易可能品目を 選定하기 위하여 日本에 대한 南·北韓의 輸出入品目を 調査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에 달하는 品目이 南·北韓 사이에 交易可能性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1984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南·北 經濟會談에서도 쌍방이 제시한 交易可能品目 가운데 여러 品目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著者が 제시한 南·北韓 사이의 交易推進方向中 특히 韓國은 北韓에 대해 工產品을 輸出하고 北韓은 韓國에 대해 1次產品을 輸出하는 식의 垂直分業形態는 北韓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優位性을 나타내는 交易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見解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第5章에서는 北韓의 GNP를 推定하는 問題에 대하여 論議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問題點이 있는데 첫째는 GNP를 定義하는 방식이 社會主義體制와 資本主義體制간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둘째는 주로 消費財에 賦課되는 것으로서 小賣價格과 都賣價格의 차이로 볼 수 있는 去來收入金이 市場經濟下의 間接稅와 유사한 性格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의 問題이고, 셋째는 換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著者は 既存 北韓의 GNP를 推計한 崔周煥, 金永圭, 李豊의 세 方法이 각각 어떠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가 檢討하고 있다. 그리고 共產圈國家에서 政府의 豫算이 보통 GNP의 60%에 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北韓도 政府 豫算이 GNP의 60%를 차지할 것이라는 假定下에 北韓의 GNP를 單純推定한 著者 自身の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結論의으로 金永圭, 李豊 및 著者の 推定値는 서로 비슷하여 北韓의 GNP規模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評價(p. 143 및 p. 256)되고 있다. 그러나 著者が 指摘하고 있듯이 北韓의 GNP를 제대로 推定하는 데에는 아직도 더 많은 研究作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既存의 研究方向에 따라 GNP를 推定하는 作業을 계속 發展시키는 이외에, 基本需要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또한 生活의 質은 어떠한가를 南·北韓간에 比較·評價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 指摘한 대로 유익한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또한 北韓은 主要 工產品, 農產品 및 에너지源의 生産量을 物量單位로 發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實物側面에서 南·北韓의 經濟力이나 經濟規模를 比較·分析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作業이고, 우리 基準이 아닌 北韓의 基準을 사용하여 南·北韓의 經濟力을 비교해 보는 것도 시도할 價値가 있는 研究라고 생각된다.

第6章에서는 南·北韓의 産業構造를 비교

하고 있다. 특히 工業部門의 경우 北韓은 經濟·軍事建設의 併進政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重工業最優先政策을 오랜 기간동안 지속해 온 결과로 工作機械部門이 우세한 반면 韓國은 輸送機械와 電子工業部門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第7章에서는 北韓의 貿易構造를 자세하게 分析하고 있다. 1984년 현재 北韓의 交易量中 共產圈國家가 차지하는 比重은 59.6%, 西方圈國家의 比重은 40.4%이다. 北韓의 貿易規模는 1980년에 最高水準에 달하였는데 輸出은 16.4億달러이었고 輸入은 17.1億달러였다. 한편 1981년말 현재 北韓의 外債殘額은 약 30億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 基準으로는 절대규모가 작으나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의 立場에서는 상당한 規模에 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의 國別 輸出構成(1984년)을 보면 蘇聯 38.0%, 中共 22.9%, 日本 11.1%, OECD諸國(日本 제외) 12.5%, 東歐 3.6%이었고 같은 해의 輸入構成은 蘇聯 33.7%, 日本 22.1%, 中共 17.8%, OECD(日本 제외) 8.4%, 東歐 3.3% 順이었다.

北韓은 貿易統計를 發表하고 있지 않으므로 貿易相對國인 蘇聯, 中共, 日本 등에서 發表한 對北韓 輸出入統計를 이용하여 北韓의 輸出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推定値는 研究機關別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 관한 여러 종류의 統計資料中 貿易統計가 가장 求得이 용이하므로 앞으로 北韓에 대한 研究는 貿易分野에서 비교적 尠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第8章에서는 北韓의 經濟運用 및 이와 관련된 基本的인 制約點을 살펴 본 후 北韓의 經

濟運用에 대한 意思決定의 土臺가 되는 基本的인 價値觀에 대하여 分析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과도한 中央集權의인 意思決定過程이 지니는 취약點을 補完하기 위해 채택된 靑山里 方法과 大安體系의 意義를 살펴 보고 있다.

한편 冊의 <表 8-1>을 보면 北韓의 總豫算 가운데 軍事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1971년까지는 30%線을 초과하다가 1972년부터 갑자기 17.0%로 떨어진 후 1980년에는 14.7%까지 減少하였는데 이는 실제에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意圖的으로 比率을 줄여서 發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指導者들이 일반적으로 韓國의 社會, 政治體制를 輕蔑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體制를 選好하고 있다는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韓國의 對策은 經濟成長의 優越性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自由'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人間이 自由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어떤 價値體系보다도 優位에 있는 것이며 體制의 優越性은 바로 이 점에서 判가름이 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韓國經濟의 立場에서는 衡平의 增進을 도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資本主義體制를 건전한 방향으로 發展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第9章은 要約 및 結論이며 이어서 國內외의 參考文獻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 끝으로 附表를 통해 本文의 資料를 자세히 補完하고 있으며 또한 合營法 및 그 施行細則을 附錄으로 실고 있다.

北韓經濟를 폭 넓게 理解하고자 하는 讀者들에게 이 冊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記述上의 問題로 論議의 構成이 다

소간은 體系的이지 못한 느낌이 있고 英語式 表現이 눈에 띄는 흠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問題이며 전체를 理解하는데는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報告書가 學界에 대한 귀중한 貢獻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앞으로는 北韓經濟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研究外에 微視的이고 分野別의 구체적인 研究도 필요할 것 같다. 또한 北韓의 GNP推定에서 보듯이 北韓經濟에

대한 基礎的인 研究의 強化가 특히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韓國은 GNP가 1,000億달러의 수준을 넘어 經濟規模로 볼 때 全世界에서 20位로 成長한 經濟大國인 만큼 앞으로는 北韓經濟에 비하여 韓國經濟가 優越하다는 것을 보이는 研究에서 進一步하여 客觀的으로 北韓經濟의 微視分野를 좀더 研究·分析하는 接近方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